

‘제2경춘국도’ 빠르면 내년 추진

〈남양주~춘천〉

건설사업 용역 완료

동서고속도 주말·휴가철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기대
양구~인제 개량도 착수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의 여름 휴가 시즌과 주말 교통정체를 해소 할 제2경춘국도 건설이 빠르면 내년부터 추진된다. 제2경춘국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양구·인제지역 상경기도 실릴 국도 31호선 양구~인제(원통) 구간 시설개량사업 기본·실시설계도 착수됐다.

▶관련기사 3면

17일 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최근 완료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사업을 ‘국회반영사업’으로 선정, 내년 정부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 중이다. 일반적인 국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비용·편의(B/C) 등을 따져야 하지만 국회반영사업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된다. 이 사업이 국회반영사업으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춘천 서면 당립리 간 32.9km를 잇는 제2경춘국도는 주말과 연휴 때 주차장으로 변하는 동서고속도로 춘천~서울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급한 현안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설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8,613억원, 왕복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계획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으로 제2경춘국도 필 요성은 더욱 커졌다. 도원동해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방문객은 55만8,016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40만2,168명보다

다 15만5,848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양양은 지난해 6만1,798명에서 올해 7만9,183명으로 피서객이 늘었다.

양구~인제(원통)간 국도 31호선 시설(노선)개량사업도 최근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양구~원통 국도 31호선 중 이용이 불편한 12㎞ 구간에 대한 노선개량을 하는 이 사업은 제4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 사업비는 713억원이다. 이 사업이 끝나면 동서고속도로와 함께 서울~춘천~양구~인제~속초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될 전망이다.

유학렬·이성현기자

【 2017.7.18(화) 강원도민일보 】

제2경춘국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춘천 당림~남양주 금남리 32.9km

예타성 조사 전 단계 추진 기대감

춘천과 경기 남양주를 잇는 제2경춘국도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원주국토관리청은 최근 제2경춘국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토대로 건설될 제2경춘국도는 춘천 서면 당림리~경기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를 잇는 32.9km 구간으로 총 8613억 원이 투입돼 4차로로 신설된다. 용역에는 경제성은 충분하지 않지만 국도 46호선 경춘국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정책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예비타당성 조사 전 단계여서 사업 조기 추진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 금남 IC에서 끊긴 자동차 전용도로를 춘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7월 춘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공론화됐다.

원주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간 대형공사도 지역사 참여 확대해야”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축 공사에 충북지역 건설사 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합니다.”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청북 도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도내 민간 대형공사에도 공 공공사처럼 공동도급을 통해 지역 건설사 참여를 배려해야 한다 고 힘주어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025년까지 15조5000억원을 투자해 청주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에 반도체 공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 토목공사에만 약 2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건설업계는 지역업체가 30% 공동도급을 통해 참여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지역업체 가 30% 참여하면 6600억원가량 의 토목, 건축공사 실적을 쌓을 수 있게 돼 일감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는 것이다.

건설협회 충청북도회는 지난 달 SK하이닉스에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윤 회장은 “충청북도민과 청 주시민은 화학물질 노출사고 등 위험을 감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K하이닉스의 투자를 유치했다. 반도체 산업 특수성이 있는 공종은 인정하지만, 토목과 건축 등 일반 공정에서는 공동도급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일로, 실질적 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충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한은행 진천연수원 건립공사 와 농협 충북본부 건설공사, 한 전사옥 건설공사 등 공공기관



SK하이닉스 청주 신축공사

건축·토목에만 2.2조원 투입

30%만 배려해도 업계 숨통

복잡한 입찰제도 일원화하고

중소 기술형입찰 기회 늘려야

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서도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충북 지역 사업은 16건으로, 그중 △ 충북 바이오 헬스 혁신 융합밸트 구축 △ 중부고속도로 호법~남 이 구간 확장 △ 충북선과 중앙선 을 연계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 공 항 육성 △ 충주·청주·진천 무예 스포츠 중심도시 육성 등이 있다. 충북 건설업계는 이 공약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꼭 반영 돼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약에서는 빠졌지만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저수지 뚝 높임 공사를 꼽았다. 윤 회장은 “각 지역 현장에 맞는 중소 규모 저수지 축조와 노후 저수지 준설 및 개량 사업이 우

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 했다. 특히 충북지역에는 노후 저수지가 많이 있는데 누수 등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뚝 높임 공사를 하면 식수, 농업용수 확보에 도움이 될뿐더러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더구나 각 시·군 지역 건설 사들의 일감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건설 기술자 배치 기준 완화와 복잡 한 입찰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윤 회장은 “현재 기재부와 행자 부 계약법규를 기반으로 공공 기관 나름대로 계약제도를 따로 두고 있다. 복잡한 입찰제도로 발생하는 행정 낭비가 커 입 찰제도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 개방으로 건설업 면허 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제도권으로 너무 많은 업체가 생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건설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에서 실태조사나 등록 기준 강화 등 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상용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건설사 기술형입찰 참여 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기술형 입찰에 참여해서 기술과 실적을 쌓고 싶어하는 곳이 많지만 수주 실패/시 설계비용 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설계보 상비를 늘려 중소건설사가 기술 형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